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7~10면

윤석열 퇴진 투쟁을
지지하라
2, 3, 4, 5, 6면

참사 대응에
무능한 경찰
16면

노동자 운동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비판 13면
잇따르는 철도 사고 14면
택배 노동자 투쟁 15면



윤석열은 몰려나라

관련 기사 1~10면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십시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이태원 참사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73퍼센트를 넘었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참사를 책임질 주체로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꼽혔다(33.3퍼센트).

실제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직접 지시(공안 대응과 마약 범죄와의 전쟁 강조)와 그의 정책 기조의 우선순위(경제 위기 고통 전가 위해 권위주의적 수단을 강화하기)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참사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윤석열 퇴진 요구다.

윤석열이 참사 일주일 만에 “죄송한 마음” 운운했지만, 정부의 대응 기조는 ‘정부 책임 없다’이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꼬리자르기 수사 본격화, 민주당사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탄압,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 사찰 등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를 부른 정책 기조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다.



11월 5일 윤석열 퇴진 집회

각료 해임 요구는 윤석열의 책임 전가에 이용된다

윤석열이 참사의 사실상 책임자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책임은 사과로 그칠 수준이 아니다.

10월 29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끝난 뒤 집회 대응에 전념했던 경찰 지휘부는 일제히 임무 해제 상태로 들어갔다. 이후 작전 태세를 유지한 유일한 경찰 조직은 마약수사팀뿐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거리 축제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이유의 하나다.

그런데도 윤석열 자신은 남 일처럼 경찰·소방 지휘부를 질책하고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런 역대급 책임 전가를 하는 윤석열에게 각료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의 책임 전가에 이용된다.

관례를 봐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터졌을 때 내각 일부가 물러나는 것

은 대통령 보호를 위해서다. 윤석열도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면 사과 요구에 양보하며 일부 각료를 경질할 수 있다.

이런 제스처를 통해 윤석열 반대 운동을 분열시키고 퇴로를 열어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해양경찰 해체를 공표했다. 동시에,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그러나 정홍원은 다음 총리를 못 구해 총리직에 복귀했고, 이주영은 8개월 뒤에야 ‘사퇴’했다.)

그러나 내각 일부를 속죄양 삼아 위기를 벗어난 박근혜는 참사의 한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조처들을 다시 추진했다.

결국 세월호 인양, 박근혜 처벌 등 최소한의 정의라도 구현된 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승리한 덕분이었다.

국정조사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사과, 책임 각료 경질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정의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정의당은 현재 국정조사 요구를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를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이 국정조사를 반대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정치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치고 경찰 수사가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 재판에 가도 책임자 처벌

이 쉽지 않고, 특히 고위 지휘부로 갈수록 더 그렇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강제력 있는 수사가 이렇진대 하물며 국정조사는 그런 권한도 없고 대통령실·국민의힘의 방해로 받고, 그 때문에 계속 타협할 수밖에 없다. 늘 그랬듯, 국정조사는 몇몇 고위관료를 불러다 호통만 치다 끝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대중의 관심을 말만 일삼는 국회로 옮겨 가게 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을 가장 중요한 동력인 거리 운동을 부차화할 수 있다.

‘심판’론의 문제점 — 2008년 촛불의 교훈

민주노총 등은 대통령 사과와 총리·장관 사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민중공행동 등과 함께 11월 12일(토)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 추모 촛불”을 연다.

시민 추모 촛불 집회는 윤석열 퇴진 집회와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와 사실상 경쟁하는 집회를 개최해, 퇴진 운동과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교육지에서 “10만 조합원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정권 심판”은 무의미하거나 기껏해야 선거를 의식한 용어다. 민주노총 등은 사실상 2024년(4월 10일) 총선까지(1년 5개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2008년 촛불 운동의 기시감이 든다.

2008년 6월 10일 100만 명이 참가해 촛불 운동이 정점에 이르자 많은 참가자들이 이명박 퇴진을 외쳤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지도부 다수는 이명박 퇴진 요구 제출을 거부했다.

대책회의 지도부 다수는 이제 거리 투쟁을 멈추고 국회(당시 용어로 “제도권”)로 공을 넘기자고 주장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전국 선거가 없는데도 정권 ‘심판’이라는 선거용 구호를 꺼내들었다.

대책회의 지도부는 퇴진 요구 제출 문제를 토론해 보자며 시간을 끌어 대중의 정권 퇴진 열기를 식히고는, 결국



지금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다.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MB OUT”(이명박 꺼져라) 구호를 “심판”으로 대체했다.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대선에서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었다.(이 심판론은 그 선거들을 앞두고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전략적 야권연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퇴진이 아니라) 심판론으로 투쟁의 열기가 식자, 7월 초에 이명박은 반격에 나섰다.

대책회의 활동가들은 수배를 당했고, MBC PD수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이 언론 탄압을 받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았고, 노동자연대는 국가정보원이 사주한 인

터넷 댓글 비방 공작에 시달렸다.

지연된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재개하려고 이명박이 권위주의적 수단들로 반격을 가한 것이다.

두 달 뒤인 2008년 9월 세계 금융 공황이 터지자 이명박은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2009년 1월 용산 참사라는 비극적 살인 진압이 벌어진 것이다.

답답한 상황의 돌파구는 선거가 아니라 2011년 봄 아랍 혁명과 서구에서의 광장 점거 물결 속에서 한국의 거리 운동도 회복되면서 열렸다.

그러나 이런 투쟁의 잠재력이 또다시

대선 심판론에 의해 제약되면서 계급간 세력균형이 대중 운동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지 않아 2012년 박근혜 집권을 막지 못했다.

이런 돌아보기가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도 이태원 참사 직전, 다가오는 금융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떠넘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와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막을 수도 있었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하게 일조했던 것이다.

지금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다.

2019년 조국 수호 촛불과 지금의 퇴진 촛불은 똑같은 게 아니다

노동운동과 대다수 좌파는 빠르게 바뀌는 정치·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격돌을 준비하며 투쟁을 대담하게 전진시키기보다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듯하다.

이런 점이公安세력과 검찰에 포착되지 않을 리 없다. 민주노총이 퇴진 요구와 거리를 두는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통일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도 2월 투쟁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많은 좌파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총선 승

리와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저지를 위한 열성 지지자들의 운동 정도로 보는 듯하다.

물론 퇴진 촛불 지도부는 2019년 조국 수호 촛불 지도부와 인물 면에서 겹친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수호 촛불은 개혁 염원 배신으로 대중이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방어하는 집회였다.

반면, 지금의 윤석열 퇴진 촛불은 윤석열 정부가(심각한 정치·경제 위기에 직면해) 우익 본색을 드러내며 제1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이다.

레닌은 올바른 투쟁 계획을 내놓으려면 계급 세력 관계가 계속 바뀌는 것을 그때그때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촛불을 같이 볼 수 없다. 거의 같은 인사들이 주도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2019년에는 진보성이 없었고, 지금은 진보성이 있다. 집회 참가자들도 단순한 맹목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다.

좌파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반윤석열 정서와 투쟁의 주도권을 민주당 진보파에게 계속 내주게 될까 봐 두려워서다.

요하게도, 퇴진 촛불과 선긋기를 하는 좌파들의 다수는 정작 2019년 조국

수호 촛불을 지지했다. 또,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사이비 개혁을 (때로 주저하면서) 지지하기도 했다.

2019년 당시 조국 수호를 지지했던 좌파들은 지지의 대가로 선거법 개혁을 통한 의석 확대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개혁 염원 대중의 지지를 상당히 빼앗기며 존재감이 더 약화됐다.

아마 이런 경험이 현재 퇴진 촛불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꽤 작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돌아보기는 나중에 하고 당장 윤석열에 대한 정면 공격과 효과적인 반격에 나섰으면 좋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본지는 지난호 헤드라인과 논설을 통해 윤석열 퇴진 요구와 집회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게 그거일 뿐인데 뭣 하러 민주당 좋은 일 하나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게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으로 있으면서 개혁 염원을 저버린 민주당이 꼴보기 싫다는 심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게 그거다’ 하는 반응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대부분 기간에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민주당에 (때로 비판적인) 지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퇴진 운동이 윤석열 정부를 강타해 그로부터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챙기는 꼴을 못 보겠다며 퇴진 요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명백히 하는 자본주의 정당이지만, 현재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라는 법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수사의 진정한 목적은 정적 제거와 권위주의적 통제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1 야당 탄압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그 칼끝이 결국 노동운동과 좌파로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11월 9일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던 그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그 칼끝이 결국 노동운동과 좌파로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는 것은, 당면한 적에 맞선 투쟁의 힘을 분산시킬 것이다.



11월 5일 서울 송례문 인근 윤석열 퇴진 집회

시간에 보안경찰이 통일운동 활동가들을 체포·압수수색했다.

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앞세워 우파 야당을 수사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당시 좌파가 우파 야당을 방어할 까닭은 하등 없었다.

그러나 우파 정부의 중도파 야당 탄압은 그 반대 효과를 낸다.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 권위주의적 수단들을 앞세워 위기의 책임과 대가를 노동계급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민주당을 “주사파”라고 비난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비난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싸잡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으로 매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는 것은, 당면한 적에 맞선 투쟁의 힘을 분산시킬 것이다.

물론 <노동자 연대>가 우파 정부의 중도 야당 탄압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 민중주의(진보적 포퓰리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윤석열 정부 반대 진영의 전열이 흩어져 우파 정부가 그 틈을 비집고 운동을 각개격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면 전술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때조차도 <노동자 연대>는 민주당에 아무런 환상을 갖지 않고 필요한 경우 결코 비판을 삼가지 않을 것이다.

‘(선거) 심판’론은 대중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민주노총과 (대다수 좌파를 포괄하는 연대체인) 전국민중행동은 11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와 같은 시각에 “이태원 참사, 국가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 추모 촛불”을 개최하기로 했다.(애초 집회 제목은 “국가는 없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시민 촛불”이었는데, 최종 제목에서 “대통령 책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민주노총 등은 윤석열 퇴진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쟁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과 기성 좌파 밖에서 일찍부터 벌어지고 있었고 10월 하순부터는 수만 명 규모로 늘어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퇴진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2018~2019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해 노동조합과 기성 개혁주의 정당 지도자들이 취한 태도를 연상시킨다.

당시 사회당과 공산당 등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저항을 지지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그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대체로 효과가 없던) ‘행동의 날’ 집회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조직 노동계급이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며 마크롱 정부에 대항하는 노란 조끼 운동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시민 추모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집권한 지 반년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한 대중 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동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를 굴리듯 만드는(‘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추모 촛불’ 집회 조직자들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들이 열려고 하는 활동은 주되게 선거인 듯하다. 민주노총은 “11.12 10만 조합원 총궐기로 윤석열정권 심판투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읽기 자료).

그러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2024년 총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점점 커질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 정부를 강타할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총선에서 좌파가 선전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 5면으로 이어짐

윤석열 퇴진 집회는 더 커져야 한다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주류 언론의 외면과 축소 보도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부에 적의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친화적인) 사회운동 단체들,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들 등. 10월 22일 집회에는 특히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퇴진 집회 측 조직자들이 친민주당 사회운동가들이긴 하지만, 민주당 자체가 이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퇴진 집회에서 연설한 것을 두고도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민주당은 선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이 윤석열 정부를 심각한 불안정에 빠뜨리는 것을 꺼린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때도 민주당은 최초의 가두 시위가 분출한 지 석주가 지나서야 그 운동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퇴진 운동을 헌정 질서 틀 내로(탄핵) 가져가려고 애를 썼고 (운동 내 개혁주의 세력의 도움을 받아) 이력 저력 성공했다.(운동의 규모가 아주 컸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시작됐음에도 퇴진 운동은 3개월 더 지속됐다.)

지금조차도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을 일관되게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연거푸 허용했고 (10월 24일, 11월 9일), 10월 24일 국정감사도 반나절 중단하다가 복귀했다.

윤석열 퇴진 집회는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퇴진 요구와 결합시키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광범한 대중이 겪는 생계비 위기 문제를 연결시킨다면(사회경제적 요구들을 결합시켜), 퇴진 운동은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계급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퇴진 집회 리더들의 정치가 온건하기 때문에, 이런 전진이 자동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퇴진 운동에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운동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고 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시 말대로 투쟁의 구체적 계기들을 (수정 구슬 보듯이) 예견할 수는 없다. 능동적 투사들이 그때그때 그런 계기들을 만들려 애써야 한다.



대학에서 윤석열 퇴진 유인물을 나눠 주는 학생

과제

윤석열 퇴진 운동은 잠재력과 약점이 공존한다.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노동자들의 힘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움직이면 노동계급이 윤석열에 맞선 투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 상황은 철도 등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거리 시위가 융합됐던 박근혜 퇴진 운동 때와는 다르다. 그렇기는커녕 “윤석열 퇴진”과 “시민 촛불”로 나뉘어 있고, 집회도 따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배계급도 분열하지 않고 있다(박근혜 추문의 핵심 인물 최순실을 처음 폭로한 게 조선일보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 독자들은 윤석열 퇴진 운동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조직 노동계급의 정치 의식은 노조 지도부의 선거 심판론을 비판하며 퇴진 투쟁을 지지하라고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노동자들이 투쟁적으로 싸울 때조차 조합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광범한 대중에 계급의 능력을 과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퇴진 운동과 노동자의 잠재력이 융합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가능성은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성장해 그 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노동조합 내부로 확산되는 것이다.

퇴진 운동이 커지려면 또한 청년들이 더 많이 참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지 청년 독자들은 거리와 대학에서 청년들의 퇴진 운동 참가를 호소해야 한다.

김인식 (본지 발행인)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를 씌웠다. 영장에는 ‘자통민중전위’라는 단체명이 나와 있었다고 한다. 사건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을 규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 따르면, 국정원은 적어도 5년 전부터 이들을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5년이 넘는 해외여행 경력을 근거로 북한 당국과 “회합·통신”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팀장인 장경욱 변호사는 사찰과 압수수색 모두 “초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 패스워드를 도용해 외국 이메일 서비스 계정을 열어봤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이번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로 규정했다.

황철하 6.15남측위 경남본부 상임대표는 경남 활동가들이 ‘윤석열 심판 경남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한 것과 보안법 탄압이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강은주 전 위원장은 말기 암 환자로 제대로 거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국정원과 경찰은 막무가내로 그의 집으로 밀고 들어가 무려 1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강 전 위원장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경찰은 진보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진보 연구자를 체포했다.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같은 날(9일) 오전 수원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회고록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안보 수사대는 그의 자택과 통일시대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일성 회고록 제작·판매에 관여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이처럼 보안 경찰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자들을 집요하게 수사하며 괴롭히고 있다. 출판 자체를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중의 슬픔과 분노가 크고, 그 참사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런 때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탄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태원 참사 전부터 이미 윤석열은 법질서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수단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공격하면서 말이다.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불온한’ 책을 내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를 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보안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단체, 좌파 단체들을 사찰한 일도 폭로됐다.

지금의 보안법 탄압도 이런 맥락 속에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연결해서 안보 문제를 부각해 이태원 참사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 당국과의 ‘연계’를 문제 삼지만,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진정으로 겨누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와 운동이다.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이태원 참사 항의 유인물 반포 제지하는 연세대 당국과 경찰

지난 2주간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은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이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고, 따라서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대학가에서 반포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은 이태원 참사에 슬퍼하고 정부에 분노하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한 윤석열 퇴진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힘을 모으는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립대(7일)와 연세대(8일)에서 회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던 중에 경찰이 출동해 이 활동을 제지하려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당국의 신고로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 들어온 경찰

신경질적 반응

이날 유인물을 반포한 각 대학 학생들은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들이다. 수년 동안 학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매주 정기 신문 홍보 활동을 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쳐 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왔다'고 했지만, 대학 캠퍼스 내 학생들의 평화로운 의견 표명 활동에 대해 경찰이 직접 출동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그 자체가 유인물을 받아 가는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학생 양선경 씨는 이렇게 말했다.

“신문 <노동자 연대> 판매 활동 중이었는데, 30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은 소음 문제로 신고받았다는데,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해 왔거든요. 이태원 참사 당시 참사 전부터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다른 나라 경찰인가 보죠?”

“저희는 경찰에게 ‘학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의견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니 얼른 캠퍼스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정보와 경찰도 불렀더군요. 저희는 항의 후에도 굳건히 유인물을 반포했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희 활동에 대한 응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더욱 경찰이 왜 이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연세대는 더 기막하다. 대학 당국이 직접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 관리자 일부가 와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라”고 강요하고, 총무처 팀장은 “확성기 쓰지 마라, 경찰에 신고했다”며 대놓고 활동을 방해하고 거친 반말로 학생들을 겁박했다.

당시 유인물을 나눠 주던 연세대 임재경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과 학교 관리자들이 [유인물 반포 활동을 못 하게] 저희를 둘러싸고 있자 지나가던 분들이 ‘왜 학생들을 괴롭

히냐’고 하시고, ‘유인물 달라’며 직접 받아 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오랫동안 학생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같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워 오고 [이를] 전통으로 여겨 왔는데, 확성기 사용이 불법 집회라뇨. 완전히 억지고 윤석열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주장을 겨냥한 정치적 대응이에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이 기본 가치가 돼야 할 대학에서 학교 당국이 앞장서서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교내 의견 표명 활동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을 직접 부르기까지 한 것이다.

연세대재단은 조선일보사 회장 방우영이 재단 이사장에 장기 재임한 뒤 지금은 GS칼텍스 회장 허동수가 이사장으로 있다. 연세대재단은 전통적으로 조선일보사, 보수적 기독교 등이 재단을 이끌어 왔다.

보수적인 대학 당국이 윤석열 정부를 돕는 활동을 한 것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비판 여론에 대한 사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을 경찰이 대학생들의 학내 활동에 대해서까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 활동에 대한 대학 당국의 방해와 경찰의 사찰 행위는 이 정부가 결코 이태원 참사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이따위 위협으로 윤석열 퇴진 주장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박해신 노동자연대 청년학생 조직자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포럼 거듭되는 참사, 국가, 자본주의

이태원 참사는 지금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이 얼마나 철저히 무시되는지를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세월호 참사, 광주 아파트 붕괴 참변 등 모습을 바꿔가며 거듭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이토록 무관심할까요?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 원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비극적 참사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은 아깝다 아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발제 김승주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2022년 11월 16일(수) 오후 7시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 출구 3분 거리)

참가 대상 주제에 관심있는 학생, 청년

신청 링크 bit.ly/forum20221116

참가비 4000원 (장소 대여에 사용됩니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ws.youthstu

youth.workerssolidarity.org

(인스타그램/페이스북 DM 가능)

마르크스주의 포럼은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이 주최하는 월례 포럼입니다. 매달 주요 사회 이슈나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상 등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문의

010-5443-2395

youth@workerssolidarity.org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김승주

이 글은 11월 8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이다.



영상 보기

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자 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울 한복판의 한 골목, 파출소도 소방서도 지척이었던 곳에서 그저 길을 지나가던 300여 명이 압착돼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참사로 가는 길을 닦은 명백한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한책임, 공동체적 책임 따위의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참사의 핵심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룰 문제는 이 참사를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부정한 것이 이 점이지.

재난 대응의 주무 부처이자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의 장관 이상민은 참사 직후 말하기를,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11월 3일 <조선일보>는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은 사고가 터진 후에나 할 수 있는 말이며, ‘사후 끼워 맞추기’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같은 날 진중권 씨는 <중앙일보>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사고’이고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진실 은폐이자 정부에 면죄부 주기입니다. 핵심 문제는 정부와 경찰이 심각한 인파 집중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안과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지, 일반 시민이 질 수 있는 종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이번 헬러원 기간에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이고 그에 따른 안전 사고 위험이 있음을 예상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11월 2일 <한겨레>가 입수해서 보도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헬러원 기간 이태원로 안전 대책 현황’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헬러원 데이에) 평일이나 통상 주말 대비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하고 곳곳에 인파가 운집해 무질서와 사건·사고가 빈발한다.” “올해는 헬러원 데이가 주말과 이어지며, 작년과 달리 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 재개로 주말에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의 ‘2022 헬러원데이 종합치안대책’과 용산서 정보과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전 위험 분석’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1월 1일 경찰청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헬러원 축제를 앞둔 10월 26일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태원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다중운집 질서 유지 방안’

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인파 밀집 예상”, 심지어 “압사 사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 사고 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그리 많은 인력이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좁고 경사진 주요 출입 골목에 대한 일방통행 조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등 단순하지만 핵심적 조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군중 관리를 위해서 드론이나 위치 정보 추적 같은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군중 관리 제도와 경험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불꽃축제, 연말 타종 행사, 월드컵 응원 행사 등을 떠올려 보면, 대규모 군중 행사 관리 경험이나 기술 부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우선순위가 참사를 낳았다

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윤석열 자신과 경찰의 우선순위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헬러윈데이’ 중 합치안대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찰은 이태원역 주변 10곳을 지정해 ‘군중 분산 조치’를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을 각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 해밀턴호텔 뒷골목에 집중적으로 7곳이 지정됐고,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위쪽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2017~2019년에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 보고서에 명시했고, 2020년에는 심지어 압사의 위험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헬러윈 대책에서는 이런 대비 지침과 인력 배치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헬러윈 대책의 압도적 초점이 마약 단속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경찰 지휘부 차원의 대대적인 헬러윈 마약 단속 기획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의 헬러윈 대비 계획을 수정해 마약 단속 경찰력을 거의 3배로 늘렸습니다. 용산구청의 헬러윈 데이 긴급 대책도(코로나19 문제를 제외하면) “마약류 범죄” 단속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경찰 지휘부와 용산구청은 압사 사고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기존의 안전 인력 배치 조치를 없앴고, 경찰은 이태원 헬러윈 축제를 마약 사범 검거 기회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뒤집힌 우선순위가 다른 아닌 대통령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마약 범죄와 흉악범죄의 피해를 부각시켰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지지율 추락 이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일선 경찰에 총기 지급 예산을 늘리고 총기 사용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헬러윈 앞두고 ‘마약과의 전쟁’ 속도 내던 윤석열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무리를 해서라도 마약 범죄를 막겠다,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도 올해 8월 취임한 이후 1호 강조점이 ‘마약류 집중 단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이 참사 8일 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사 5일 전에도 윤석열은 국무총리에게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에 따라 참사 3일 전 국무조정실은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것일까요? 윤석열은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범죄 소탕에 대대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경찰력 강화와 서민층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범죄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대중의 불만이 큰 가운데 부자 세금 감면해 주고 민영화나 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려면 권위주의적 수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바로 이를 정당화해 주는 수단이 마약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10만이 넘는 군중 동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대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책임, 곧 일선 경찰이 공공 안전보다 마약 단속을 우선하게끔 만든 책임은 윗선의 명령권자들, 무엇보다 최고위 지시자인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가진 자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그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려 한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는 참사 당일 경찰의 관심사가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대통령 경비에 쏠려 있었던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평화적 시위일 뿐인 당일 집회 통제에 투입된 기동대의 수만 1100명에 달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9시 24분까지 집회 통제를 하고 있었고, 서울경찰청장이 8시 32분 퇴근 전에 내린 마지막 지시도 집회 관련 격려였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말입니다.

집회에 배치되지 않은 2개의 기동대 부대는 신고된 집회도 없는 대통령 사

저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는 대비하지 않으면서, 혹시 모를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는 철저히 대비했던 것입니다.

책임 회피, 저항 단속은 발 빠르게

참사가 벌어진 이후 윤석열의 대응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단속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은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정부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유가족들과 평범한 사람들은 참사라는 말로도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하는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윤석열은 책임 회피적인 언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참사 직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다른 방면에서 아주 발 빨랐습니다. 경찰청이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 의심되는 내부 문건을 보면, 진실은폐,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 항의 억압에 발 빠르게 대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과거 참사와 유가족·언론·사회운동단체 등의 동향을 꼼꼼히 분석해 정부 책임론 확산 방지책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가족 회유책을 제시하며 유가족이 정부를 따르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당일 경찰 배치라는
구체적인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쥐어짜기와
대중 억압이라는
윤석열의 근본적인 우선순위도
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다**

참사 현장 아비규환이던 때 경찰은 온통 윤석열 지키기



참사 때처럼 집단적 투쟁에 나설까 봐 우려하는 것이죠. 유가족과 정부 직원을 1대1로 매칭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의 저의가 의심되는 까닭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CCTV를 확보해 참사 현장에 있던 개인들을 수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태원 파출소와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은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용산서 차원에서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어 “왜 4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냐”고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말뿐인 사과로 통치고 자기 책임은 회피한 채 말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모두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여지없이 반복되는 진정한 책임자들의 케케묵은 꼬리 자르기 수작입니다.

또, 경찰은 방송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참사 관련 온라인 게시물들을 삭제·차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혹한 영상이라거나 가짜뉴스라는 명분인데요. 물론 참사 생존자나 참사 유가족이 과롭게 느낄 촬영물이 유포대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은 생존자나 유가족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번 참사의 진실을 덮고 여론을 무마하고 항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보진영 주류는 혐오 표현의 국가 규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응은 경찰과 검찰 같은 억압기구들이 자신들의 목

적을 위해, 즉 저항 억압이나 좌파 탄압을 위해 혐오 표현 규제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퇴진이 추모다

국민의힘은 지난 토요일 열린 참사 추모 및 윤석열 퇴진 집회를 “국민의 슬픔을 이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난하며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항의 운동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석열과 고위 권력자들이 이번 참사가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대통령 퇴진 운동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찰청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에 심원한 타격을 미쳤음을 알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몇 개월 만에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진 초유의 정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자와 기업주들 같은 특권층 봐주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불만이 그만큼 크고 광범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런 위기에 대응하려고 법 질서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수단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경찰력 배치 등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태원 참

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이 추진하는 정책 노선의 한 결과임을 보여 줍니다. 대중의 안전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에나 관심이 있고, 결국 이것은 대중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권력의 지휘자 윤석열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정책과 우선순위가 유지되고 비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가 추진하는 온갖 개악 속에서 노동자 서민의 삶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좌파와 민주노총은 퇴진을 요구해야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요구가 이미 상당합니다. 정부가 조용한 애도를 앞세우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와중에도 11월 5일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사람들의 집회에 1만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주요 지도부들은 윤석열 퇴진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국정 조사,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당도 윤석열의 공식 사과와 장관 해임,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큰 규모의 노동자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정책과 우선순위가 유지되고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총도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로 입장을 정하고, 퇴진 촛불 집회와는 별도로 ‘구탄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좌파와 노동운동 주요 지도부들의 이런 입장은 퇴진 운동의 확대를 막고 자칫 고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반길 것은 윤석열과 권력자들, 대기업들일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번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다면 머지않아 반격과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좌파와 노동운동 주요 지도부들은 퇴진 요구와 선 긋는 기존 입장을 바꿔, 퇴진 운동이 더 확대되고 더 심화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키워 그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또한 억울하게 희생된 156명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정리

발언들, 너무나 유익했고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정말이지 당시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윤 우선, 안전 뒷전, 부정부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같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집약돼 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멸시와 탄압은 그 정부의 우선순위를 밑바닥까지 보여 줬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몇 년 뒤에 벌어진 박근혜 퇴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

지금의 이태원 참사에도 윤석열이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악행들이 집약돼 있습니다. 윤석열은 고물가나 고금리로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에게 부자 감세나 공공요금 인상, 민영화 등으로 더 큰 고통을 안겨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항할까 봐 경찰들한테 더 많은 총을 쥐어 주고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라,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고분고분 받아들이게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는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일 경찰 배치라는 구체적인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민 쥐어짜기와 대중 억압이라는 윤석열의 근본적인 우선순위도 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또 다른 모습으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과 좌파의 과제

한 분이 참사를 정치화한다는 국민의힘과 우파의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이자 참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민주당과 이재명의 꼭두각시, 응원 부대쯤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몇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반윤석열 정서를 대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



서민층 생계 공격, 야당 탄압, 이태원 참사까지 윤석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매우 크다 11월 5일 퇴진 촛불 집회

히 참사 직전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와 민주당 압수수색 같은 야당 탄압을 벌이자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좌파는 대중의 누적된 이런 반윤석열 정서를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고 또 그것을 모아 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지금 대중의 적잖은 일부가 윤석열 퇴진 요구에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박근혜 퇴진 직전 수준인데, 좌파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건설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지금 여러 좌파와 노동운동 지도부가 왜 윤석열 퇴진 운동과 선을 긋고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하는 비난, 즉 윤석열 퇴진 집회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에 노동운동과 주요 좌파 정당의 지도자들이 속으로 동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라 어차피 퇴진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운동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한 걸음이라도 당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퇴진하면 민주당과 이재명만 수혜를 입는 것 아닌가?’ 윤석열 퇴진을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강제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을 보면서 노무현 자신이 ‘저 촛불이 언젠가 나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자신감을 얻는다면 그것의 즉각적 결과가 이재명의 집권이더라도 운동이 더 나아갈 힘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윤석열이 이 위기에서 무사할수록 좌파 운동에 대한 반격과 보복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앞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투쟁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 운동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른 분이 어떻게 해야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의 지도부가 친민주당이고 온건하다는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바꿔 낼 유일한 길은 이 운동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운동의 규모와 투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변이 넓어진 운동은 자신감이 커져서 급진화할 여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의 지도부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건희 특검 같은 부차적인 쟁점을 앞세우는 것은 이 운동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좌파들은 이 운동에 적극 뛰어들어서 이 운동이 경제 위기 상황과 직결된 사람들의 생계비 위기, 이태원 참사,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같은 윤석열의 더 중요한 악행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참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의 정책과 우선순위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우리의 삶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토론하고 설득하고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반격 시도 11월 1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폭력 연행하는 경찰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핵발전소 수출은 결국 국가 대 국가 거래이기 때문에 …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한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

10월 3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폴란드와 푼트누프 핵발전소 개발계획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폴란드는 자국 푼트누프 지역에 원자로 2~4기의 핵발전소를 세우려 한다.

이 일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방산 협력을 강화해 온 것과 관련 있다. 한국은 폴란드에 탱크, 자주포, 전투기 등의 무기를 대거 수출하고 무기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핵발전소 건설 수주가 용이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핵발전소 건설 수주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경쟁 중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이 위험한 행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폴란드와 체코 등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공여해 왔다. 물론 무기 공여 비용은 미국과 나토가 지원해 주고 있다.

최근 체코 정부는 자국이 보유한 T-72 전차 90대를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다. 체코군 수준에 견줘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여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서방 강대국들의 지원 덕분이다. 12월부터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체코에 제공해 체코군의 전력 공백을 메워 주기로 했다.

T-72

미국과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T-72 전차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대기로 했다. 이 업그레이드로 T-72 전차에 새로운 광학·통신 장비가 추가되고 장갑이 보강될 것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체코도 폴란드처럼 핵발전소·무기 패키지 수출로 접근하는 중이다. 폴란드에서 성공한 사례를 더 확대해 보려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한국과 체코 두 정부는 원전·방위산업 등의 분야에 관해 10여 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하면서, 서방제 무기로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려 애쓰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행위다. 설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도, 동유럽 무기 수출로 나토의 전쟁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체코 언론들은 한국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신궁 미사일 등의 무기를 우회 공여하려 한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결국 윤석열 정부가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영익



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정부는 전쟁 확대에 일조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부메랑이 될 짓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worker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발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특목
- 135개 다양한 정점을 다룬 왓시즈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출: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440호 발행처: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46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한 수주간 고강도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양이다.

“한국 국방장관 이종섭과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이달 초에 만나 포탄 거래를 진전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다.”

WSJ은 한국이 이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공언”을 지키면서도 미국에 협조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포탄 제공은 포탄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치열한 포격전을 벌이면서 지난 8월 미군의 155밀리미터 포탄 재고는 미국 국방부가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미국 관리들은 전한다.”

한국의 무기 제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제국주의 대리전을 대놓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5mm 포탄. 한국의 포탄 제공은 포탄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한국 정부의 포탄 제공과 별도로, 미국은 이달 초 주한미군이 보유한 포탄을 선적해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WSJ은 주한미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일부 장비의 제공을 요청받았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훈련과 한·미·일 연합 훈련,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교차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그렇지만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이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WSJ은 전했다.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발전하는 미사일 전력, 더 일반적으로는 국방 현대화와 방위 산업의 역량 증대 덕분에 한국이 유럽과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무기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WSJ은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거래도 언급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전차, 곡사포, 로켓 발사대

58억 달러어치를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폴란드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제3국들을 경유해 북한에게서 포탄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대리전

WSJ이 보도한 미국을 통한 한국의 무기 공여는, 예전에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하는 국가들에 제안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지난 5월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열린 43개국 회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무기 제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제국주의 대리전을 대놓고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물량을 최대한 쏟아붓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무기 제공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1월 3일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운동”에 불과하며,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장기화될 중국과의 충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더한층의 적대 행위” 같은 일이 그런 일의 방아쇠가 돼 동아시아에서 커다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불안정이 증대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대리전을 돕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좌파는 한국의 무기 제공 반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김영익

러시아는 철군하라! 미국과 나토는 개입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지원 중단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도심 집회와 행진

11월 26일(토) 오후 3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종각역 4번 출구)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다.

윤석열표 노동 개악의 주요 내용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실질임금 삭감하기, 재정 긴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등이다.

① 임금 억제

정부는 특히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을 고통에 내몰았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도 강하게 추구해 왔다(고금리 정책 자체가 임금 억제 효과를 노린다). 임금 인상 자체를 거둬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을 1.7~2.2퍼센트로 정한 것(실질임금 삭감)이 보여 주는 바다.

정부는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도 최대한 낮춰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했다. 저임금층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더한층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위기의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전반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도 먹고살기 힘든 판에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기업주나 정부 관료, 당신들은 고작 월 200만 원으로 가족 건사하며 살 수 있는가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금 억제를 위한 좀 더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를 개악(직무성과급제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넓혀 가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직무성과급제가 “생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늘리면서 저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더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는 것(상향평준화)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목적은 정반대다. 그 본질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해서 전반적인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는 데 있다. 즉, 임금 억제를 통한 자본의 비용 줄이기가 목적이다. 직무성과급제는 또한 노동자들 간 성과(수익성) 경쟁을 강요하고 단결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윤석열의 고통 전가 정책을 끝내려면 지금 벌어지는 퇴진 운동에 함께해야 한다

② 장시간 유연 노동 확대

윤석열 정부가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는 장시간 유연노동 확대도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조치이기도 마찬가지다. 이는 사용자가 더 적은 인건비로 노동자들을 장시간 일 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당장에 노동부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어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있다. 지난 달 19일부터 제조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는 해외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시행을 넓혔다.

안 그래도 올 들어 7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경우는 5793건으로, 지난해보다 77.2퍼센트나 급증했다. 정부의 조처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장시간 노동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또, 노동부는 얼마 전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올해 말까지 법을 뜯어고쳐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이들은 왜 맨날 찬밥 신세여야 하나?

③ 공공부문 민영화, 인력 감축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고(민영화)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실제로 중앙 공공기관 350곳이 자산 매각 계획을 내놨다. 향후 5년간 22조 6000억 원가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공공 부지와 일부 사업, 자산을 민간에 팔아넘기겠다는 민영화다.

전기 판매 부문을 민영화하고, 철도 차량정비 업무 등을 외주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인력 감축은 이런 문제점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중앙 공공기관들이 발표한 인력 감축 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6735명(전체 정원의 약 1.5퍼센트)이

줄어든다. 청소·시설관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그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통공사가 1500여 명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공공기관들도 정원을 축소하려 한다.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가 보여 주듯, 이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심각한 실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더 좁히는 효과도 낸다.

④ 중대재해법 추가 개악, 권위주의적 공격

윤석열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추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폭과 수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2024년 1월까지 시행 유예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도 관심이 없다.

최근 정부가 법 질서를 앞세워 권위주의적 공격을 강화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에 총기 지급을 늘리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탄압에 나서는 것은 이런 대노동계급 공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옥죄는 데도 열심이다. 올해 초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이유로 택배노조 지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대우조선 하청, 하이트진로 화물, 택배 등의 투쟁에 제기된 손해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법률 개정 요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고 한 것 등이 보여 주는 바다.

다종의 위기(경제·제국주의·기후·전염병)가 서로 얹히며 깊어가는 가운데 윤석열의 노동개악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한 노동자 대중을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높아진 지금, 노동운동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과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적극 뛰어들어 저항을 넓고 깊게 만들어야 한다.

신정환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따른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11월 5일 저녁, 안타깝게도 코레일(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을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다.

이번에 숨진 청년 노동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동료(동기)의 다리 절단 사고를 경험했다고 한다. 당시 충격을 받아 직장을 옮길까 고민도 했지만 꼭 참고 일하던 와중에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오봉역은 전체 철도 화물량의 36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노동강도가 높은 곳이다. 입환 작업은 한 량에 40톤이 넘는 열차 사이에 들어가 열차를 붙였다 떼다 하는 힘든 일이다. 노동자들은 “두 시간만 작업해도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고된 일”이라고 말한다.

특히 열차가 다니는 선로 위를 오가며 일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인력과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위험을 방치했다.

인력 부족

신경배 철도노조 청량리역 지부장은 말했다.

“3명이 하기에 힘든 작업을 2명이 하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 사측은 혼자만 아니면 된다고 2인이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선로에 제대로 진입하는지를 확인하는 노동자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고 직전 다른 화물열차 작업을 할 때 열차의 진로를 잡아 주는 선로 전환기가 고장 난 게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도 없었다. 오봉역은 장비와 안전 시설이 낡고 부족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악명 높다.

문제는 오봉역만이 아니다. 올해 벌써 철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봉역 사망 사고 다음 날에는 영등포역에서 탈선 사고가 벌어졌다. 승객 275명을 태운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에 진입하던 중 차량 6량이 탈선한 것이다. 이 사고로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잇따른 안전 사고는 노동자·승객의



원희룡의 ‘정치 쇼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들’ 정부는 인력을 확충하지는 않으면서, 철도 사고를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이용하려고만 한다

안전보다 수익성을 우선한 정부와 사용자 측의 우선순위가 낳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예산과 인력을 강력하게 통제해 왔다.

최근 2년간 코레일 측은 정부에 인력 861명을 증원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중 125명만 승인했다.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입환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코레일 측은 안전 설비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거둬 휴지 조각이 됐다.

영등포역 책임 전가

오봉역 사고 직후 국토부는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코레일 사장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사용자 측은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에 열을 올려 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해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코레일 사장을 기소하고 압수수색

등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당 친화적인 공공기관장들을 물갈이하는 숙정에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나라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원희룡의 엄포가 뜻하는 바다.

또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격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에서 노동자들의 태만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봉역 사고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안전규칙만 지켰으면 막을 수 있었다”거나 “2인 근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민영화와 구조조정 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철도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코레일이 관제권, 차량 정비 등을 독점한 탓”이라며 민영화 추진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거둬 드러난 바는 정반대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안전을 위협하고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하며 인력 감축, 정비·유지보수 업무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

레일 사용자 측은 인력을 2000여 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지금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철도 노동자들을 더한층의 고통으로 내몰 것이다.

예견된 참사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1월 9일 영등포역을 찾아 ‘정치 쇼’를 하려던 원희룡은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토부가 주범이다!”, “안전 인력 확충하라!”, “정원 감축 철회하라!”.

원희룡은 직원 몇 명을 불러 하려던 간담회를 철도노조와의 간담회로 거짓 포장한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잇따른 철도 사고는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였다. 거둬된 안전 사고, 노동자들의 경고와 항의가 이어져 왔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은 묵살했다.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쟁을 윤석열 퇴진운동 등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연결시킨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은영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는 택배 노동자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노동자·서민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도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이 크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지만 계약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대리점 수수료, 부가세, 차량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들이 각종 비용을 제하고 가져가는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물가는 물론 기름 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해 왔다. 택배 노동자들은 생계비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경기도에서 택배 일을 하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유가보 조금 할인율도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됩니다. 차량을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2000만 원 되는 차량을 산다고 하면 이자가 월 6만~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집화를 하며 받는 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전부다. 호봉이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도 없고, 식비와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도 거의 없다. 무엇보다 수수료(임금)가 십수 년째 오르지 않아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계속 되는 과로사

결국 수입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몬다. 올해 들어서만 안타깝게도 택배 노동자 3명이 과로사했고, 1명은 뇌출혈로 쓰러졌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동안, 택배사들은 매출 증가로 배를 불렸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내 택배 3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640억 원, 9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9퍼센트, 32.2퍼센트가 늘었다.

그런데도 원청인 택배사들은 날로 치열해지는 저단가·속도 경쟁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인력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기업주들은 막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

충원 등 조건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를 위반하면서 말이다.

김현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울산중부지회 조직부장은 말했다.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로 택배비를 올려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택배사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오전 중에 분류된 물건만 그날 배송하고, 이후에 분류된 물건들은 다음 날 배송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이 ‘빠른 배송’ 경쟁을 벌이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월급제를 적용 받는) 직영 기사를 투입해 택배 노동자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택배 노동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일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노동시간이 도로 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오전 11시에 배송을 나가면 신선 식품 등 일부 물건을 빼곤 사측이 건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측이 직영 기사를 동원해서 남은 물건을 다 배송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늘어났어요. 보통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요. 일하다 죽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서울·경기 쪽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나 사진이 가끔씩 올라옵니다.”(김현아 조직부장)

탄압

윤석열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벌어진 CJ대한통운 점거 투쟁 택배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자,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이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에 마련할 ‘생활물류 기본계획’에 사용자 측의 대체 배송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은 물론 장차 벌어질 쟁의행위의 효과를 떨어트리려는 것이다.

11월 10일에는 검찰이 올해 초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투쟁을 빌미로 진경호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11월 11일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 CJ대한통운 사용자 측은 이미 이 투쟁에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파업은 사용자 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 시도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기업주들의 이윤 방어를 위해 “사업장 무단 점거” 등 노동쟁의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고언한 바 있다. 검찰의 택배노조 지도부 구속 영장 청구는 이를 구현하는 것이자,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을 위한 공세 시도의 일부다.

전국택배노조는 수수료(임금) 인상, 정부의 택배 대체 배송 확대 시도 철회, 노조 지도부 구속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1월 12일 경고성 하루 파업을 하고 상경 집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지지한다.

신정환



경찰의 무능한 참사 대응

경찰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였다

김승주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무능이 질타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경찰은 한 해 국가 예산을 12조 원 넘게 쓰고, 인력도 12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이다. 예산도, 인력도 소방의 두 배다. 그런데도 경찰은 참사 당일 6시 34분부터 수십 통 쏟아진 112 신고들을 모두 무시했다. 소방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 기동대는 소방보다도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어째서였을까? 진정한 문제는 경찰의 우선순위였다.

헬리원을 앞둔 10월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참사 발생 골목을 사고 예측 장소로 정확히 짚은 보고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지시했다. "당일 저녁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

경찰이 참사 당일 집중한 다른 한 가지는 마약법 검거였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찰 대부분이 마약 단속에 투입됐고, 이들이 참사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참사 발생 후 30분이나 지난 10시 44분이었다.

헬리원을 앞두고 윤석열이 거듭 강조한 '마약과의 전쟁'은 경찰력을 강화하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켜 사람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꺼내든 수단이었다.

윤석열 퇴진 집회 통제와 '마약과의 전쟁'은 한 가지 공통점으로 꿰어진다. 바로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시도라는 점이다.

경찰이 윤석열의 권력 지키기 도구임은 유가족 회유책과 정부 책임론 확산 방지책 등을 담은 경찰청 정보국의 내부 문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최근 경찰은 통일운동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압수 수색하고 있다. 참사 항의 분위기를 냉각시키려는 시도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해경은 인명 구조에는 지독하리만치 무능했지만 항의 운동 감시와 탄압에는 발 빨랐다. 해경은 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인력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막아선 경찰 무능한 참사 예방과 대조된다

5분의 4를 유가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울에서 참사 항의 운동을 벌이자 육지 경찰은 더 노련한 솜씨로 저항 움직임을 탄압하려는 박근혜의 손발이 됐다.

경찰 — 폭력적이고 부패한 억압 기구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밀착해 있다. 경찰은 어딜 가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은 참사 현장을 지척에 두고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경찰의 무능에는 보통의 서민들이 당하는 일에 대한 경찰의 무시가 반영돼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한 희생자 부모도 이렇게 분노했다. "총리 아들이 112에 전화했으면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됐겠죠. 일반 사람들이 전화하니깐 경찰이 무시해!"

경찰은 평소에도 보통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무관심하고 느리고 형식적으로 대처하기 일쑤다.

이는 경찰의 일상적인 우선순위 자체가 대중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지배 계급 중심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지키지 않는다. 부자·권력자들의 사유재산과 그들의 권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법질

서'를 지키는 게 경찰의 주 임무다.

이는 하층 계급에 대한 편견으로도 표현된다. 경찰은 2010년 부산 여대생 납치·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전단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이라고 쓴 적도 있었다. "노동자풍"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경찰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형 인간으로 지목한다.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는 곳도 거의 대부분 노동계급 또는 이주민 거주 지역이다.

경찰은 권력층과 유착하고 그들의 범죄를 덮어 주기 일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길거리 술주정 시비 같은 사소한 문제에는 과잉 진압을 일삼는다. 구급에서 '경찰 과잉 진압'을 검색하면 3만 개 넘는 기사가 나올 정도다.

하층 계급에 대한 경찰의 적대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진압할 때다.

2001년 정리해고에 맞서 항의 연좌를 하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기습 진압으로 피범벅이 돼 쓰러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유명하다. 그 후로도 2005년 집회에 참가하던 농민 두 명과 건설 노동자 한 명, 2009년 용산 참사로 다섯 명,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때려잡아 권력자들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경찰이 수행하는 가장 본연적인 임무다.

공권력 배치의 지시자인 윤석열이 참사의 책임자

지금처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중의 불안 증폭, 정치적 양극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사회 불안정이 큰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대중을 더 쥐어짜고 사회를 더 통제하기 위해 경찰의 억압적 구실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집권한 윤석열이 대선 때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웠던 이유다. 그 속에서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만약 윤석열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 꼬리 자르기로 무마한다면, 참사를 낳은 윤석열의 정책 노선과 우선순위, 경찰의 억압적 구실 강화 방향은 유지될 것이다.

반대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에 맞서 퇴진 운동이 강력해진다면 경찰의 억압적 권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항의와 윤석열 퇴진 운동을 키워서 노동자·서민들을 더 가난하고 억압받고 위험하게 만드는 체제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 TV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11월 15일(화)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참가신청 bit.ly/1115-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